

8년째 제자리 못찾는 '관광두레사업'

485억원 투입 불구 매출 발생 30% 불과 이병훈 "단계별·맞춤형 지원, 체계화해야"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관광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내 일자리까지 창출하려는 취지로 정부가 지난 2013년부터 적극 추진하고 있는 '관광두레' 사업이 여전히 제자리를 못 찾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이 19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관광두레' 사업에 참여한 주민사업체 중 연간 단 한 건의 매출도 올리지 못하는 사업체가 전체의 3분의 2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관광정책 패러다임이 공공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변화하는 기조에 따라 2013년부터 2021년까지 48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광두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광주 1개, 전남 15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모두 107개 지역에서 606개의 주민사업체가 발굴됐지만, '매출액 발생 사업체' 비율은 2020년의 경우 27.8%,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엔 33.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3년에 시작된 사업임에도 매출액은 3년이 지난 2016년, 영업이익은 20



19년이 되어서야 파악·집계를 시작했다. 전에서 문제부가 사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운영의 내실을 다지기보다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해 사실상 발굴 사업체를 방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주민사업체를 발굴하고 역량강화와 경영개선 등 현장에서의 지원을 담당하는 '관광두레 PD'에 대한 일일한 관리감독도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 2020년 관광두레 PD에 선정된 A씨는 지자체의 관광두레센터 PD로도 활동하며 활동비를 이중 수령하고, 자신이 발굴한 주민사업체 또한 문제부와 해당 지자체로부터 중복지원을 받는 문제

를 일으켰다.

문제부는 해당 PD를 해촉했으나 A씨가 각 사업별로 활동을 수행했고, 증빙을 완료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중 수령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병훈 의원은 "이대로라면 관광두레 사업 자체가 얼마 못 가 망가질 수 있다"면서 "매년 말 평가를 통해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와 지원액을 결정하고, 주민사업체에 대한 단계별·맞춤형 지원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 중심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관광두레 사업의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정의당 "이재명, 내공남불 국감"

정의당은 19일 전남 경가지사 신본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해 "한마디로 '공은 내 것이고 불법은 남 탓'이라는 '내공남불' 국감이었다"고 혹평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후보는 어제 행안위 경기도 국감에서 우리 당 이은주 의원의 질문에 대장동 개발사업의 책임자는 본인이 맞다고 인정했으면서도 천문학적 불로소득은 유동규 등 직원들의 일탈이고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일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장동 특혜베리의 본질은 공공이 개입하여 '토지 헐값 매입, 아파트 고가 분양'을 기획한 부동산 투기 카르텔 범죄"라며 "이번 국감에서 시민이 묻고자 했던 것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누가 왜 삭제했는지, 성남시 행정의 최종 책임자였던 당시 이재명 시장은 증대한 사실을 뭉개는지 등(이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라고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 단군 이래 최대 불로소득 북마전이 돼버렸는데, 최근에야 이런 사실을 알았다는 이 후보의 답변을 과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며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공범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 후보의 태도 문제를 지적하며 "'면책특권' 제한 발언이나 질의 도중 비웃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는 당장 고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대화하는 민주당 김병욱 화천대우 TF단장 1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우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김병욱 단장과 송갑석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금주 지사직 사퇴·靑회동 추진

행안위 국감서 "완승" 자평...정책·비전 경쟁 채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9일 대장동 국감의 첫 고비를 넘기면서 본선 준비에 자신감을 붙이는 모습이다.

우려와 달리 야당이 눈에 띄는 '한방'을 날리지 못하는 가운데 오히려 의혹을 털어낸 기회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는 판단에서 '대장동 공세 이후' 준비를 본격화하는 것이다.

이 후보 측은 일단 전남 행안위 국감에서 성공적인 1차 방어전을 치렀다고 본다.

대장동 사업이 이 후보의 공익환수 성공 사례이고 민간 부문의 수익 문제는 '국민의힘 게이트'에 가깝다는 것을 차

분히 설명한 데다, 국민의힘 김용관 의원이 '렌터카 돈다발 사진'으로 조직폭력배의 허위 주장에 근거한 공세를 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국감을 통해 반전에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20일 국토위 국감까지 마치고 나면 대선 후보로서의 본선 행보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국토위 국감을 끝으로 대장동 국면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의혹은 검·경 수사로 확인하도록 하고 정책 비전을 중심으로 대선 후보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

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측은 지사직 사퇴를 전후로 이낙연 전 대표와의 회동,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등도 준비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미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며, 국감을 마치고 만나기로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내에서는 문 대통령과 이 후보의 면담 일정이 잡히면 문재인 정부 최장수 총리 출신인 이 전 대표와의 회동도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선대위 발족은 시기적으로 국민의힘이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다음달 5일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연합뉴스

농어민 생존권 '해결사' 자리매김

국감 인물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

올해 국회 농해수위 국감에서 19명의 위원 중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현장에서 담아낸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풀어가는 '해결사'로 자리매김했다.

김 의원이 가장 먼저 주목한 아이টে는 '발농업 기계화' 사업이다. 발작물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농업임에도 불구하고 기계화율이 현저히 낮아 노동력 부족이 심각하다. 최근 5년간 정부가 182억을 투자했음에도 기계화율은 3.6%에 그쳤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잘못된 투자와 정부-지자체의 '책임 떠넘기기'가 현재의 어려움을 불렀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진정은 농기계 개발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급한 것은 농기계가 아닌 '밭 기반 정비사업'이 먼저라는 것이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농민부는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사업성과는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그는 "농업진흥청과 한국농어촌공사가 함께 TF를 구성하고 기계화율 30-40% 달성을 위해 예산확보까지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구체적인 해



법을 제시했다.

김 의원의 농민 사랑은 공익직불금제에 대한 질의에서도 잘 드러난다.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은 공익직불제는 이미 전체 애로사항에서 해법까지 제시해가며 전체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풀어가는 '해결사'로 자리매김했다.

2013년 정부가 쌀 직불금을 설계했을 당시, 원칙은 농지 규모에 따른 일괄 지급이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차등지급을 주장하면서 중소 농업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고, 그 원칙이 현재의 공익형 직불금제도의 근간이 됐다. 직불금에 대해서는 설계에서부터 현행 제도의 보완까지 김 의원이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이 정계 입문했던 90년대는 쌀 시장 개방 요구가 극에 달했던 시기였다. 그래서인지, 농어민의 생존권을 대변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남다르다. 지난해, '김산업 육성법' 제정과 올해 '고향사랑 기부제법'의 국회통과에 이어 어떤 성과로 지역과 농어민들을 위한 해결사로 주목을 받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진수기자

어촌어항공단, 어촌뉴딜사업 '지지부진'

이개호 "사업역량 부족, 기존사업 지체 우려" 질타

2019년부터 어촌환경개선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어촌뉴딜 300'이 어촌어항공단 위탁사업지 114개소 중 34개소가 올해 준공 목표이지만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해수위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의원은 19일 '어촌뉴딜 300' 사업 첫 해인 2019년 선정된 70개소 중 전남의 10개소를 포함한 34개소가 어촌어항공단 위탁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올해 준공 가능한 곳이 10개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이 국감자료로 제출한 어촌뉴딜 위탁사업 진행 현황에 따르면 공단은 어촌뉴딜 사업지로 확정된 250개소 중 45%인 114개소를 맡아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3년차를 맞은 2019년 사업의 경우 34개소 모두 올해 준공을 목표로 했지만 공사가 끝난 곳은 태안 가의도 북항 1개소뿐이고 연내 준공을 앞둔 곳은 9개소이다.

2년차 사업지로 공단이 맡고 있는 55개소는 아직까지 기본계획에 이은 실시



설계 단계에 머물면서 착공이 시작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

사업예산 집행률도 저조해 114개 사업지에 교부된 예산이 5천906억원에 이르는데 지금까지 816억원을 집행해 목표집행률 49.7%에 한참 못 미친 13.8%에 불과하다.

이개호 의원은 "오는 12월께 어촌뉴딜 내년도 사업지로 50여개소가 추가로 선정될 텐데 어촌어항공단이 이를 포함한 사업 역량이 가능할지 의문이다"며 "오히려 기존 위탁사업 추진까지 지체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질타했다.

이어 "어촌뉴딜 사업이 단지 SOC만 건설하는 게 아니라 '어촌지역 공동체의 역량강화'에 있음에도 관련예산이 4%에 불과하다"며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세심히 수렴하고 어촌어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수기자

www.e-dk.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